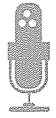


#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양극화 해소 · **질 좋은 성장 구현**

- 에너지의 **차츠통급** 역량 확충

대담 / 정병철(협회 상임부회장)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질 좋은 성장' 추구해야

무엇보다도 먼저 산업자원부 장관님으로 취임하신데 대해 집단 에너지산업계의 한국지역난방협회(KDHA) 회원사와 협회지 독자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관님의 취임 소감과 임기 중에 반드시 이루고 싶으신 포부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정말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정치입문 이전 18년간 대기업 계열 종합상사와 제조업체 등에서 근무하였고, 정치입문 이후 줄곧 경제관련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국회 예결위원장, 집권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당의장등 국회직과 당직을 맡으면서 주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해 왔습니다. 이처럼 민간기업 근무경험, 의정활동과 주요 당직 수행경험과 지식을 잘 활용해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도 잘 수렴하고 국회는 물론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듯이,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해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질 좋은 성장'을 구현하는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대내외 여건 등으로 위축된 민간기업들의 투자여지를 제고시키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일조하겠습니다.

직원들과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질 좋은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부처와 산업계에서는 丁장관님을 '힘 있는 장관'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 있는 장관'이라는 표현은, 국회와 당에서 맡았던 역할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거나 이런 표현보다는 '힘차게 일 잘하는 장관'이

라는 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은 부임 이후 수차례 '질 좋은 성장'을 강조하셨는데, 질 좋은 성장의 핵심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 동안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양적인 성장을 해 왔지만,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성장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물량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질 좋은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 좋은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①중견 기업을 집중 육성, 소수의 대기업과 수많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안정적인 '항아리형' 구조로 변화 ②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 간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을 추구 ③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해 對日무역역조 해결 ④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초일류 성장산업군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환율하락, 고유가 등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질 좋은 성장'을 통해 2만 달러 국민 소득을 달성하고, 3만 달러 나아가 5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간의 에너지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간 여러 차례의 에너지 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에너지원 다변화 (석유비중 : (1990년 53.8% → 2004년 45.6%), 정부비축유 확보(74.5백만B)등 안정적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2005), 에너지기본법 제정, 국가에너지자문회의 운영 등 참여정부 들어 에너지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에너지의 자주공급 역량 확보와 에너지 안보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정책들을 펼쳐 앞으로 고유가, 국제환경규제 등 어려운 에너지정책 여건을 극복하고 에너지의 자주공급 역량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0년 이후 LNG 장기도입계약 추진, 석탄산업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원유자주개발을 확대 (2005년 4.1% → 2008년 10%)를 위해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석유공사법 개정 추진, 유전개발펀드 출시(2천억원 규모) 등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수소경제 이행촉진법 제정 추진, 수소·연료전지 R&D 로드맵 작성 및 연료전지 실증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을 구축하여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해외의존을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2005~2007)을 수립, 추진하는 등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의 전환을 도모함은 물론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대내적으로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확충하고, 대외적으로는 협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新고유가시대가 2002년 이라크 전쟁 이후 지속되고 있어 유가가 60달러를 넘어 섰어도 단기적으로 국민경제에 급격한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등 BRICs의 에너지수요 확대,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 등으로 신고유가시대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에너지절약시책은 단기적 강제조치보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저소비사회의 이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유가의 이상급등 등으로 자율적 절약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강제적 절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발동요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사용자등에게 조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메이저급 기업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자본·기술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 자주 개발 확충을 위해 해외 자원 개발을 선도할 전문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두차례의 대통령 주재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통해, 민간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석유공사를 2013년까지 '하루 30만 배럴의 생산역량을 보유한 지역 메이저급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 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석유공사를 지역 메이저급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적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생산역량 15만b/d, 자산규모 3~4조원 규모의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2단계로 생산역량 30만b/d 규모의 지역 메이저급 한국형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특히, 석유공사의 규모 확대를 위해서 정부의 출자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나, 정부의 예산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석유공사가 일정규모(일일 15만 배럴생산) 이상으로 성장하여 해외 메이저 기업과 경쟁여건이 확보되면 개발부문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여, 에너지 관련 공기업(예 : 한전, 가스공사 등)의 출자,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상승과 함께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자부 차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2003년 12월 수립한 신·재생



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예산, 조직, 법령 등 정책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본격적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미래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소에너지의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대규모 에너지공급사와 3년간 1.1조 원 투자를 위한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을 체결하는 등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왔습니다.

올해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부문에 4,095억원을 투자하여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만에 2.5배 증가), R&D 및 보급사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가정용 연료전지 실증사업 추진, 국민임대아파트 1,600호에 대한 태양광주택 보급, 바이오디젤(BD5)의 전국보급, 국내 최대 육상풍력단지인 강원풍력 완공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예산은 2003년 1,193억원에서 2006년 4,095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5년 7월, 여중생 촛불화재 사고를 전해 듣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는 경

제 양극화에 따라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도 애로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초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에너지복지’ 확충을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9일 ‘에너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빈곤층에 대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산업자원부와 에너지 공기업들도 지난 연말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종합대책을 통해 ①혹서기 및 혹한기 전기요금 체납자에 대한 공급중단 유예 ②서민연료인 연탄의 공급안정, 배달 지원 ③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할인 등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통합·정비하여 에너지복지 정책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산하단체인 한국지역난방협회(KDHA)에 대해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적인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집단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에너지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한국지역난방협회의 역할도 더불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를 갖습니다.

우선, 회원사 상호간의 이해와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협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면 집단에너지 시장은 보다 탄력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지역난방협회가 회원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편익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경우 보다 성숙한 시장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국지역난방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